

# ‘순천 동천 출렁다리’ 계획 환경단체 반발

### 시 “새로운 관광자원 · 지역경제 활력 기대”

### 환경단체 “명분 없는 사업...백지화해야”

순천시가 출렁다리를 봉화산 대신 동천에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추진된 출렁다리는 30억(교량 25억 원+철쭉동산 등 부대공사 5억 원)을 들여 봉화산 둘레길의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봉화산 둘레길에 순천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순천관광원으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도심을 끌어들이는 구

상을 밝혔다.

이 사업은 업체 선정과정의 잠음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으면서도 10억원이 넘는 출렁다리 공사자재의 발주와 대금 지급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환경단체는 감사원에 이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시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부적격 업체와 공사계약까지 맺은 것이 드러났고, 환경단체는 출렁다리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허석

순천시장도 봉화산 출렁다리 등 민원이 많았던 분야들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1년여의 재검토에 들어간 순천시는 조례호수공원과 국가정원 내 꿈의다리 옆 풍덕동 그린웨이와 오전동을 연결하는 동천 등 3곳을 검토했고, 지난 19일 간부회의를 통해 봉화산 대신 동천변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발주해 놓은 공사자재의 재활용은 물론 새로운 관광 콘텐츠 기능, 주민들의 등을 고려했다”며 “출렁다리는 국가정원과 순천역을 연결하는 그린웨이와 오전지구를 한가지 동선으로 잇게 해 국가정원을 관광객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강점이 있다”고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설명

했다.

시는 오는 9월 공사에 들어가 12월 준공할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사업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시의 부당한 업무과장이 드러난 만큼 명분없는 사업을 백지화해 행정의 교훈으로 삼고, 기존에 투입된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옥서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이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재원이나 정책과정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어 시는 이 사업을 끌고 나가려 하는 것”이라며 “시가 이야기하는 관광자원화와 원도심 활성화 등은 행정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화학물질 김 영양제 둔갑시켜 유통업자 입건

불법 무기산을 ‘김 전용 영양제’로 속여 유통한 김 가공업자와 운반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9시55분쯤 해남 화산면 한 마을 회관 앞 23톤 트럭에서 무기산을 하적하고 있는 김 가공업자 A씨(52)와 운반업자 B씨(60)를 붙잡았다.

이들은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570통(약 1만1400리터)에 ‘김 전용 영양제’ 스티커를 부착해 금지된 화학물질을 불법 운반, 사용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후 불법 무기산 570통을 모두 압수했다. 무기산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통과 사용이 철저히 금지돼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무기산 적발을 피하기 위해 ‘김 전용 영양제’ 스티커를 붙이는 등 지능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기산 공급책 검거를 위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 광양산단 호수에 덤프트럭 빠져 운전자 사망

21일 오전 11시55분쯤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동호안 매립지에서 토사 매립 작업 현장에 투입된 25톤 대형 덤프트럭이 매립지 내 호수로 빠져들었다.

덤프트럭 운전자 A씨(43)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의식없는 상태로 구조돼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 경찰, 강원 산불 관련 한전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나주 빛가람혁신 도시에 자리한 한국전력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원도 고성경찰서는 21일 오전 수사관 4명을 한전 본사에 보내 배전선로에 대한 열화상 진단 등 점검 매뉴얼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한전 본사와 강원지역본부 사이에 주고 받은 수발문서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 한전의 과실 유무 확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성 산불 최초 발화 지점은 고성군 원암리의 미시령쪽에서 속초 방면 7번 국도변 전진주의 진공부화 개폐기에서 발생한 불꽃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민원제기하는 주민 폭행한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이 발코니 누수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회의를 방해했다며 관리소장 A씨(60)가 주민 B씨(50)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B씨는 회의실에 찾아와 “발코니에서 물이 샌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앞서 발코니 누수 현상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 차례 공사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자 이날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물이 샌다면 비가 왔을 때 확인 후 다시 찾아오라”고 했으나 B씨가 항의하자 “나가라”고 말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사지 주차 차량 뒤로 밀려 두살배기 사망

인천 강화군의 한 경사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두살 배기 남자아이가 치어 숨졌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A씨(38)가 주차한 차량이 후진하면서 아들 B군(2)이 차량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머리가 크게 다쳤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소방차에 양보하기 21일 오후 서울 중로구 울곡로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 지난해 비해 44% ↓

### 7월까지 24명... 전남은 167명으로 6.7% 줄어

광주지역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7월 말 기준)가 지난해 같은 기간(2082명)보다 10.9% 감소한 1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의 경우 올해 7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명에 비해 19명

(44.2%) 줄어든 수치다.

광주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 이어 울산 42.9%, 서울 27% 등의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 올해 7월까지 167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는 지난해 179명보다 6.7%인 12명씩 감소한 수치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은 보행 중 사망한 사람의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올해 17명이 보행 중 사망,

지난해 23명에 비해 26.1%가 줄었다. 전남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 지난해 50명보다 24%가 감소했다.

경찰은 이같은 사망자가 감소가 지자체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협의회를 구성해 시설개선 등 교통안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을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면허반납 절차를 간소화해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남도, 야영장 안전관리

### 부적정 43건 적발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야영장 안전관리실태 표본 감찰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관련 인·허가 부적정 등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해당 시·군에 처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표본감찰은 5개 시·군 22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안전감찰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주요 내용은 자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3건, 비상 손전등과 비상용 발전기(배터리) 미비치 10건, 매점 내 폭죽 판매, 구급약품 미구비 등이다.

야영장과 인접한 계곡, 급경사지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이나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관리 소홀도 4건이나 됐다.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야영장 인·허가 실태 주요 부적정 사항은 불법 농·산지 전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2건, 불법 용도 변경 2건 등이다. 위반 사항은 시·군에 시정토록 요구했다.

도는 이번 일부 시·군의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하반기에 모든 시·군으로 안전감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필 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세 차례 연속해 야영장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사익만을 우선하는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 광주상공회의소

#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